

## 광복 직후 사회상을 반영한 노래

이 사료는 해방 직후 38선 이남에서 발표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애창된 노래들의 가사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한국은 신민요, 트로트, 만요, 재즈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유행하였고, 특히 신민요 음반이 많이 제작되었다. 전시 동원 체제기인 1941년 일제가 적성국의 음악이라는 이유로 서양 음악을 금지하였다가,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되면서 38선 이남에서는 다시금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발표되었다. 1947년 8월 첫 국산 음반이 제작되었고, 특히 신민요에 비해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외래 장르로 취급되었던 트로트가 이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중 대표적인 곡으로 1949년 음반으로 발표된 <귀국선>이 있다. 해외의 동포들이 광복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조국에 돌아오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또한 근대 이후 신라는 과거 한민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1949년 4월 <신라의 달밤>이 음반으로 발표되었다. 이국적인 곡조에 향토적인 가사를 엮은 곡으로, 도쿄음악학교 성악과 출신 현인(玄仁)이 노래를 불렀다. 본래 이 곡의 제목은 ‘인도의 달밤’이었는데, 이 곡의 가사를 쓴 조명암(趙鳴岩)이 1948년 월북하자 작곡자인 박시춘(朴是春)이 작사가 유호(兪湖)에게 가사의 수정을 의뢰했고, 대대적인 개작을 거쳐 이 곡은 이후 금지곡 지정을 면하고 크게 유행할 수 있었다. 현인의 회고에 따르면, 1948년 서울 명동에 있는 극장 ‘시공관’의 무대에서 초연된 이 곡은 그날 앵콜이 수차례 터져나와 같은 노래를 11번 불러야 했으며, 이후 라디오와 지방순회 공연을 통해 이 곡은 광복 이후 최고의 인기곡이 되었다.

한편 1942년 도쿄 제국고등음악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김순남(金順男)은 광복 이후 1945년 9월 조선음악가동맹 작곡부장에 취임하였다. 이듬해 그는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위원을 맡은 박아지(朴芽枝) 작사의 <농민가>, 조선문학가동맹의 임화(林和) 작사의 <해방의 노래> 등 그가 작곡한 노래들을 발표하여, 광복 이후 좌익 계열의 대표적인 음악가로 자리 잡았다. 1946년 10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민중봉기 및 노동자 총파업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이 대구 10.1사건을 상기하여 그는 1946년 임화 작사의 <인민항쟁가>를 작곡하였고, 이 곡은 이후 남북한의 좌익 세력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임화는 1947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월북할 때 함께 월북했고, 김순남 또한 <인민항쟁가>의 작곡자라는 이유로 1948년 체포령이 떨어지자 월북하였다. 이들은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로당계 인사들과 함께 숙청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트로트의 형식을 띤 곡조에 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아픔을 가사로 담은 노래들이 인기를 모았다. 1953년 음반으로 발표된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는 흥남 부두에서 1.4후퇴로 월남한 뒤 부산의 국제시장과 영도다리 등지에서 고향을 그리는 월남민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곡의 가사 가운데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은 1960

년경 ‘남북통일’로 개사되어 새로 녹음되었다.

#### 광복 직후 좌익 계열의 문학론-임화

이 사료는 문학가이자 평론가인 임화(林和, 1908~1953)가 1945년 12월 8~14일까지 『중앙신문』에 「문학의 인민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기고문 가운데, 12월 8일에 게재된 글이다. 서울 태생인 임화는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에서 활동한 바가 있으며, 광복 이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좌익 계열의 문학을 대표하였다. 1953년 북한에서 ‘남로당 숙청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 글에서 임화는 먼저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로 조선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학 역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문학의 해방은 결코 문학계의 자체적 역량에 의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오히려 조선의 정치적 해방이 연합국의 승전이라는 대외적 요건과 함께 우리의 “지조 높은 혁명가와 영웅적 지도자들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면, 조선의 문학은 ‘정치투쟁’과 비견할 수 없으며 그저 비타협적 태도만 간신히 유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친일적 행태를 보인 문학가들에 대해서는 일제의 전쟁 정책에 부응한 “문학적 용병(傭兵)”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반대로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거나 혹은 문학·정치와 결별했던 작가들이 지켜온 ‘가치’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그것이 문학의 완전한 해방과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임화의 견해는 광복 직후 좌익 계열의 문학론과 조응하였다. 이 시기 좌익 정치세력은 당대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인식하고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광범위한 계급의 연합, 즉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좌익 계열의 문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광복 이후 좌익 문예가들은 민족통일전선에 기반하여, 대중을 바탕으로 생성될 새로운 민족문화를 지향하였다. 예를 들어, 임화와 김남천(金南天, 1911~1953) 등 좌익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좌익 이외의 인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등의 포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좌익 계열의 문학가들은 정치 혁명과 함께 문학혁명이 동반되어야 하고, 인민적 신문학의 건설을 위해 문학통일전선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광복 직후 임화의 문학적 지향은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순수문학’의 지형에서 벗어나 문학을 정치적 지도와 위계적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당대 현실에 조응·필요한 문학의 정치성과 사상성을 강조해 나갔다. 임화는 1945년 11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 “우리는 문화에 대하여 정치가 우위에 섰다는 것을 -문화 종사자에 대한 정치가의 우위가 아니라-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솔직히 표명해야 한다. 삼천만 인민의 절대다수의 행복과 불행이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성격과 지대한 관계를 가진 현재 문화가 정치의 권외에 선다는 것이 대체 허용될 일인가?”라는 지적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임화는 문화에 대해 정치가 우위에 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구성될 정치에 부응하는 문화 창조와 문학 활동을 중요시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문학을 통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학이 위로부터의 정치에 조응하면서도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문학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변화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임화는 정치우위와 문학의 독자성 결합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화는 광범위한 계급연합에 기초하여 민족문학과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글이 본 사료인 「문학의 인민적 기초」이다. 여기에서 임화는 반제국주의 전선에 기반한 민족통일전선의 핵심적 요소로서 인민을 일반화하고 있다. 물론 계급 간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민족해방론’에 근거하여 민족 대다수의 행복을 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런 점에서 임화는 민족문학의 이념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일조하며 인민의 이념을 중심에 두는 문학을 지향했다. 하지만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거세지고, 통일민족국가 건설의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임화의 문학론은 초기의 ‘유연성’을 잃어가고 더욱 정치화·급진화되었다.

#### 광복 직후 우익 계열의 문학론-김동리

이 사료는 1948년 3월 『백민』(白民)에 실린 김동리의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문학의 내용(이상성)적 기초를 위하여-」다. 김동리(金東里, 1913~1995)는 한국의 소설가·시인으로, 해방 이후 문학의 본령을 둘러싼 순수·참여 논쟁에서 순수문학의 입장에 섰다. 해당 글은 당시 김동리가 김병규(金秉逵, 생몰년도 미상)와의 문학 논쟁 과정에서 자신의 문학관을 정리하여 밝힌 원고다. 이를 통해 김동리의 문학관뿐 아니라 해방 전후 순수문학을 추구했던 우익 계열 문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리(金東里, 1913~1995)는 1935년 단편소설 「화랑의 후예」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바위」(1936.5), 「무녀도(巫女圖)」(1936.5), 「황토기(黃土記)」(1939.5), 「실존무(實存舞)」(1955.6.), 「사반의 십자가」(1955.11.~1957.4.), 「을화(乙火)」(1978.4.) 등이 있다. 일제 총독부의 검열을 겪으며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 이후 다시 왕성하게 활동했다. 해방 공간에서 김동리는 우익계 문학 단체인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 글이 쓰인 1948년 3월은 문단 내 좌우익 계열 간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던 시기다. 해방 직후 문인들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문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에 따라 ‘어떤 문학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으며, 이는 곧 문단 내 좌우익 계열 간 문학론 충돌로 불거졌다. 요컨대 좌익 계열은 문학이 모름지기 역사와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던 데 반해, 우익 계열은 문학이 역사와 현실을 초월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동리는 해당 원고를 통해 김동리는 문학의 소임이 ‘구경적 삶’의 탐구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구경적 삶’이란 무한한 자아 추구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 인간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우익 계열의 문학론을 집약한다. 김동리는 대다수 사람이 일상에 만족하고 머무르지만, 문학은 “직업적 삶”을 넘어서서 삶에서 일상생활의 논리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리는 좌익 계열 문학론을 두고 문학을 특정 정당에 예속시키고 인간을 유물사관의 획일성에 빠트리는 견해라고 비판했다. 김동리는 문학이 현실 인간사의 대립 구도를 다룰 수 있으나, 그중 한 편을 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순수문학을 내건 그의 소설도 종교 간 대립구도나 이념 간 대립구도가 주요하게 나오지만, 양극단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은 시선이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는 곧 그가 문학을 통해 결합과 파국이 공존하는 생의 ‘구경’을 탐구하려 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김동석(金東錫, 1913~미상) 등의 좌익 계열 문학인은 혼란스러운 시대의 지식인이 새로운 시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현실 일선에서 뒤로 물러난 문학을 하겠다는 우익 계열 문학인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김동리의 문학론이 순수를 가장했을 뿐, 행동이 필요한 시기에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순수하지 않은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가 강조하는 역사를 초월한 인간성이라는 개념 역시 추상적,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좌우간 문학론 논쟁은 1948년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이는 좌익 계열 문인 다수가 월북함에 따라 남한지역에 좌익 계열 문학론이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곧 한국의 문단은 우익이 주도하게 되었으며, 김동리를 비롯한 우익 계열 문학론이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이 사료는 1947년 조선어학회가 발간한 『조선말큰사전』 제1권의 머리말이다. 머리말에는 『조선말큰사전』이 나오기까지 조선어학회가 밟아왔던 과정을 개괄하고 있다. 1910년 조선광문회의 사전 편찬작업부터 시작해 조선어사전편찬회, 조선어학회 결성, ‘조선어학회 사건’을 거치며 진행되었던 사전편찬운동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언어정책에 있어서 조선총독부 동화정책의 핵심은 일본어 보급이었다.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조선어는 금지되고, 일본어가 상용화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고유 언어를 일시에 금지시키는 것은 조선인의 반발을 사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언어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우선 조선어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일본어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여 일본어 사용을 유도했다. 대신, 조선어는 식민지배의 편의를 돕는 ‘지방어’로 활용되었다. 직접적으로 조선인과 접하는 일본인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지방어’로서 조선어가 필요했다.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운동은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에 대항하면서 진행되었다. 조선어학회는 1921년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어연구회를 전신으로 한다. 1931년 조선어연구회는 회칙개정과 함께 학회의 명칭을 조선어학회로 변경하였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에 대항하여 민족어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철자법 정리·통일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각지에 흩어져있는 조선어를 모아 체계화하는 사전편찬작업에 나섰다. 1926년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을 치렀고, 1929년 10월에는 각계 인사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사전 편찬의 시작을 알렸다. 1931년부터는 동아일보사가 진행하던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해 전국단위 강습회를 전개했다. 이후 조선어학회는 차례로 ‘한글맞춤법통일안’, ‘표준어사정’, ‘외래어표기’ 등을 펴내며 철자법 및 표준어, 외래어 표기 등을 정리하고, 1936년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사전편찬 작업을 승계하여 사전편찬운동을 이어갔다. 마침내 1940년 3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어사전 출판 허가를 받았고, 1942년 3월에는 대동출판사의 협조로 원고 일부의 조판과 교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며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42년 8월 홍원에서 함흥영생고등여학교 학생이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고 쓴 일기를 빌미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치안유지법’ 내란죄를 적용하고 4차에 걸쳐 28명을 구속했다. 모두 조선어학회 사전편찬원이나 조선어학회를 후원하던 사람들이었다. 12명은 기소유예를 받아 1943년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극로, 이윤재, 정태진 등 16명은 기소되어 복역하였는데, 이윤재, 한징은 옥사하였고, 이극로, 최현배 등 4명은 해방 이후에야 풀려났다.

한편, 이 과정에서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말큰사전 원고』가 증거품으로 압수되어 사전편찬 작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다행히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해방 후 1945년 9월 8일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되어 『조선말큰사전』의 모체가 되었다. 이후 조선어학회는 『조선말큰사전 원고』를 바탕으로 1947년 『조선말큰사전』 두 권을 간행하였으며, 3권부터는 학회와 사전 명칭을 각각 한글학회와 『큰사전』으로 바꾸고 1957년까지 총 6권을 간행하였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를 결성한 이래 28년 만에 완간된 것이다.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202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 1953년 사상계 창간호의 권두언-인간과 인격

이 사료는 1953년 4월 발간된 『사상계』 창간호에 실린 권두언이다. 『사상계』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지식인들과 학생들 사이에 널리 읽혔던 대표적인 종합지다.

창간호 권두언은 ‘인간과 인격’이라는 제목 하에 인간의 본질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 글이다. 권두언의 저자는 고금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인간관을 열거하며 그 대부분이 인간성의 한 측면만을 고립적으로 강조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권두언의 저자는 “통일과 조화의 인간관” 수립과 이를 기초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권두언에 따르면, “인격도야”를 위한 “인격성 교육”은 인류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3월,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준(白樂濬, 1896~1985)은 공산주의에 대적할 국가 차원의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국민사상지도원(이후 국민사상연구원으로 개칭)을 설립하였다. 국민사상지도원의 기획과장이었던 장준하(張俊河, 1918~1975)는 잡지 『사상』을 발간했다. 국민사상지도원의 기관지였던 『사상』은 ‘한국전쟁으로 혼란스러워진 국민정신을 바로 잡겠다’라는 성격이 명확한 잡지였다. 1952년 12월까지 발간되었던 『사상』의 뒤를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사상계』가 발간되었다.

1950년대 『사상계』의 주요 집필진이었던 장준하, 양호민(梁好民, 1919~2010), 신상초(申相楚, 1922~1989)는 1920년 전후에 태어난 학병 세대의 월남 지식인이었다. 그들은 연희대학교 총장 백낙준, 한국신학대학 교수 김재준(金在俊, 1901~1987), 오산중학교 교사 출신의 함석헌(咸錫憲, 1901~1989) 등 1900년 전후에 태어난 서북 출신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멘토로 삼았고, 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처럼 『사상계』의 필진은 주로 발행인 장준하와 지연과 학연, 종교 등으로 맺어진 사이였으며, 월남한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정권의 독재에 직면하여 『사상계』 필진이 내세웠던 두 축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였다. 그들은 당대의 정세를 자

유세계 대 전체주의 국가의 대결이라는 진영 논리로 이해하면서도, 점차 파행적으로 치달았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독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논의가 등장했다. 『사상계』 필진은 반공 평화통일론을 고수하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상계』는 장면 정권의 국토개발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장준하를 비롯한 편집위원들은 국토건설본부라는 반관반민 운동 단체에 참여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장면 정권이 몰락하면서 국토건설본부의 활동 역시 정지되었고,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필진은 다시 언론인으로 복귀했다.

5.16군사정변 직후, 『사상계』는 군사정권이 취한 부정축재자 처리, 농어촌 고리대 정리 등의 일련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력 연장의 징후가 짙어지자 『사상계』 필진은 점차 군사정권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1961년 7월호에는 민정이양 문제를 제기한 장준하의 권두언(‘긴급을 요하는 혁명과업의 완수와 민주정치에로의 복귀’)과 5.16은 일부 군인들의 무력에 의한 쿠데타일 뿐 민중의 지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함석헌의 글(‘5.16을 어떻게 볼까’)이 실렸다. 박정희(朴正熙, 1917~1979) 정권에 대한 『사상계』의 비판은 1964년 한일협정 반대투쟁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해에 이르러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다루기 위해 ‘긴급 증간호’를 발행하는 등 대부분의 지면을 한일협정 비판에 집중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사상계』에 대한 세무사찰과 지속적인 판매 방해 및 유통망 교란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사상계』를 탄압했다. 『사상계』의 주축이었던 장준하는 1966년에 정권의 월남파병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는 1967년 옥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 변모했고, 『사상계』에서는 점차 손을 뗐다. 이후 『사상계』는 부완혁(夫琬爚, 1919~1984)이 인계하여 이끌어갔으나, 1970년 5월호에 김지하(金芝河, 1941~2022) 시인의 <오적>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시인과 함께 발행인과 편집자가 구속되었고, 발행등록이 취소되면서 폐간을 맞이했다.

## 1968년 제정된 국민 교육 헌장

이 자료는 1968년 12월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이다.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하여 생산적인 주체를 확립시키고자 했다. 이는 196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통령이 주창한 ‘제2경제론’ 즉 모든 국민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그에 걸맞은 정신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1968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문홍주(文鴻柱, 1918~2008) 문교부 장관에게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 정립과 시민 생활의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각 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한 교육 장전의 제정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 6월 박정희는 권오병(權五柄, 1918~1975) 문교부 장관에게 다시 한 번 교육헌장의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문교부는 26명의 기초 위원과 48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 박준규(朴浚圭, 1925~2014)·이만갑(李萬甲, 1921~2010)·이규호(李奎浩, 1926~2002)·박희범(朴喜範, 1922~1981) 등이 제출한 논문을 토대로 대학교수 20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준비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이인기(李寅基, 1907~1987)와 건국대학교 교수 유형진(柳炯鎭, 1926~1985)이 작성된 논문들을 종합·정리했고, 박종홍(朴鍾鴻, 1903~1976)과 이인기가 '헌장기초위원'을 맡아 7월 23일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원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유·평화·정의와 같은 현대 윤리의 보편적 덕목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이 강조되었다. 헌장은 1968년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2월 5일 대통령이 이를 선포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선포일인 12월 5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삼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하였다.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의 총체적 기획자이자 실질적 제작자였다. 직접 국민교육헌장 심의 위원들을 발탁하였고 국민교육헌장의 수정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또한 「국민교육헌장 제정동의안」이 국회의 동의권행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내어 국민교육헌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위상을 부여하였다.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뒤 범국가적 차원에서 헌장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편을 추진하였고, 『국민교육헌장독본』 265만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부하였다. 또한 국민학생을 위한 『헌장 그림책』 130만 부를 발간 배포하였다. 1969년부터 문교부는 직접 출판사를 지원해 헌장이념 도서를 발간하게 하거나 각종 단체에 대대적인 도서 개발 및 출판을 장려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각급 학교 교실과 교과서 전면에 게재되었고, 당시 출간된 모든 서적과 영화 음반의 첫 부분에 찍혀 배포하게끔 의무화되기도 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대통령이하 전 공무원도 헌장을 암기하게 했다. 각급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암기할 것을 강요하였고,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암송 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암송에 이어 박정희 정권은 일제 말기의 전시 총동원 체제기에 성행했던 여러 국가주의 의례도 부활시켰다. 모든 국민은 거리를 걷어가다가도 오후 6시가 되면 반드시 부동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고, 극장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기립해서 애국가를 불러야 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



다. 국가주의에 우선한 국민교육헌장이 일괄적인 교육을 강조하여 다양성과 개인의 삶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교육헌장 제정 기념식과 각급 학교 교과서에 헌장의 수록 등을 차례로 중단했다. 1995년 11월에는 교육부가 국민교육헌장의 공식적 기능이 중지됐다고 밝혔고 2003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을 폐지했다.

## 국립서울대학교 창립안

이 사료는 미군정기인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2호로 제정·시행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다.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성대학 및 서울 주변의 각종 관립전문학교를 전부 폐지하고, 이를 새로 설립하는 국립서울대학교로 흡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사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7조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문교부가 추천하고 군정장관이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치하며, 임시 이사회는 문교부장, 문교부차장,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제7조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직능과 임무는 실로 다양하다. 이사회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전반적 방침을 수립하고, 총장을 천거하며, 교직원들의 봉급을 규정하고, 학생이 수학할 학과목과 과정을 제정하는 등 대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이 법령으로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서울의 10여 개의 전문·사범학교가 합쳐져 국립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서울대학교 창립은 이른바 “국대안(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파동”에 휘말리며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법령 공포 후 약 1년간 지속되었던 국대안 파동은 미군정기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 지역의 관·공립 학교를 통폐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종합대학으로 흡수하고자 했던 미군정의 시도가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의 고등교육제도 재편의 방향과 그것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기에 실시된 고등교육제도 재편의 원칙은 일제강점기의 복선형 교육제도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고등교육제도를 4년제 대학으로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고등교육은 제국대학과 전문학교라는 이원적 형태로 나누어졌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관·공립 전문학교, 사립 전문학교 순으로 서열화되었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복선형 학제를 4년제 대학으로 단일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기존의 전문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미국의 주립 종합대학교를 모델로 한 국립서울대학교를 신설하려 했다. 학회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학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당시 미국의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에 널리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시도는 해방된 새로운 나라에 더 많은 교육기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 수용 능력 감소와 교수 부족 문제, 대학교에 새로 도입된 학사 행정 절차와 규정의 불합리성, 미국인 총장 임명 문제, 이사회 제도 비판 등이 문제시되며 반대에 부딪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사회의 구성 방식과 권한이었다. 문교부 관료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사회에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국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사회 규정이 관료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사회 제도의 대안으로서 인사 결의권을 포함해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수자치제’를 제시했다.

국대안 반대운동이 격렬해지며 학생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했고, 상과대학, 법과대학,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국대안 반대운동은 다른 대학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중학생까지 참여하는 시위로 확대되었다. 당시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교 수는 57개에 달했고, 시위 가담자는 4만여 명에 이르렀다. 국대안 반대가 극렬하게 전개되며 고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미군정은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고 이사회를 민간 한국인으로 구성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학내 구성원의 대학 운영 참여는 여전히 배제되었다.

국대안으로 표면화된 관·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정책은 이후 대학 사회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국대안 파동으로 인해 수많은 교수와 학생이 대학을 떠났다. 결국 국립서울대학교는 재적자 8,217명 가운데 5,000명이 등록을 한 가운데 개강을 맞이했다.

##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을 둘러싼 논쟁

이 사료는 소설가 정비석(鄭飛石, 1911~1991)이 『서울신문』에 연재한 소설 『자유부인』에 대해 벌어진 논쟁을 다루고 있다.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총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되었으며, 연재가 끝날 때까지 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소설이 연재되는 동안 『서울신문』의 판매 부수는 대폭 증가했으며, 연재가 끝난 이후 발매된 단행본은 14만부가 팔려 대한민국 출판 사상 최초로 판매량 10만 부를 넘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자유부인』은 세 차례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자유부인』은 대학교수의 부인이 가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다 탈선의 길로 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오선영은 국문학과 교수 장태연의 부인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다. 그녀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여 바깥 세계의 화려한 모습을 접하고, 자유와 부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 화려한 바깥 세계에 물들어가던 오선영은 사교

춤을 배우기 위해 만난 남편의 제자 신춘호와 ‘춤바람’이 나고, ‘댄스홀’에도 출입한다. 한편 장태연은 미군기지에서 타이피스트(Typist)로 일하던 박은미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오선영은 신춘호에게 버림받고, 뒤이어 만난 한태석과의 관계도 틀어지자 갈 곳을 잃고 방황한다. 결국 오선영은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장태연은 그런 아내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혼란스러운 생활세계와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다. 소설 속에는 화려한 서울 시내의 모습·고급 공무원의 생활·상류층 여성들의 생활상과 윤리·도시의 대중문화 등이 담겨 있다. 1950년대 서울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서구 문화를 흡수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또한 전후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서울 도시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와 같은 혼란상 속에서 기존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잘 표현하는 용어가 ‘자유부인’이다. 자유부인은 기존의 기혼 여성들과는 달리 가정과 사회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류층 기혼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선영이 다시 남편과 가정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소설의 결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부인’의 ‘자유’는 기존의 가부장적 윤리관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소설은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엘리트계층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자유부인』이 연재 중이었던 1954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황산덕(黃山德, 1917~1989) 교수는 『대학신문』에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이라는 제목의 공개 비난문을 실었다. 이 글에서 황산덕 교수는 『자유부인』이 대학교수와 그 부인들을 모독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유부인』과 같은 소설은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족문화의 권위를 모욕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자유부인』을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낱알이 파헤치는 이적 소설”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작가 정비석은 3월 11일자 『서울신문』에 「탈선적 시비를 박(駁)함」이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그는 황산덕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비난을 가한다며 반박하였다.

이에 황산덕 교수는 3월 14일자 『서울신문』에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항의에 대한 답변」을 실어 재반박하였고, 이후 홍순엽(洪淳曄, 1911~1992) 변호사가 3월 21일자 『서울신문』에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을, 문학평론가 백철(白鐵, 1908~1985)이 3월 29일 『서울신문』에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발표하면서 이후 이 논쟁은 작가의 윤리와 창작의 자유, 신문소설의 대중성과 예술성 등의 주제로 확대되었다.

대중 가요의 검열과 금지

이 자료는 1975년 문화공보부에서 시행한 문서로, ‘공연활동 정화대책’에 따라 한국예술윤리위원회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가요를 각 전파사 등에 통보한 공문이다.

유신정권은 자유분방하거나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가요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1975년 6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심의 기준을 통해 많은 음악을 금지시켰다. 여기에는 국가 안보와 국민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 풍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거나 모방한 것,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것, 패배적이고 자학적인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미 공개된 음반도 예외가 아니었다. 1차 재심사에서 신중현(申重鉉, 1938~)의 노래 등 43곡, 2차 재심사에서 이장희(李章熙, 1947~)의 「그건 너」 등 45곡이 금지됐다.

12월에는 팝송 규제 조치도 발표됐다. 1차 135곡, 2차 126곡에 대해 방송 및 음반 팔매를 금지시켰다. 밥 딜런(Bob Dylan, 1941~)의 '블로잉 인 더 윈드(Blowing in the wind)' 등 91곡이 저항, 반전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금지됐다. 여기에 대마초 파동도 대중가요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으로 1976년 초까지 100여 명의 연예인이 대마초 연예인으로 불리며 입건되고 그 가운데 수십 명이 구속됐다. 여기에는 신중현, 김추자(金秋子, 1951~), 이장희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대수(韓大洙, 1948~)와 조영남(趙英男, 1945~)은 미국으로 떠나버리는 등 대중가요계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유신정권이 내세운 대중가요 금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송창식(宋昌植, 1947~)의 「왜 불러」는 서울대생 시위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는 이유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사회에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양희은(楊姬銀, 1952~)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허무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김민기(金敏基, 1951~)의 「늙은 군인의 노래」는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대체적으로 저속, 퇴폐, 불온 등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여러 대중가요도 금지시켰다.

유신정권은 대신 박정희(朴正熙, 1917~1979)가 지었다는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과 같은 ‘건전 가요’를 적극 보급하여 국가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일제 강점기의 가요 정화 운동을 본뜬 건전 가요 운동이 전개되었고, 유신정권은 그 음반이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LP나 카세트테이프에 꼭 한 곡씩 이 건전 가요를 집어넣도록 했다. 건전 가요 가운데 애국심을 담은 「몽치자」라는 노래는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1987년 8월 문화공보부가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을 밝힘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국내 금지곡 총 382곡 중 월북작가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294곡에 대한 재심에 착수하여 186곡을 해금시켰다. 1988년 10월에는 남북·월북 음악가 63명의 작품도 규제에서 풀렸다. 마침내 1996년 대중음악인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왔던 사전심의제는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1960년대 서울 극장가와 상영 영화

이 자료는 1966년 8월 이루어진 「영화법」 개정에 관한 문서이다. 1962년 1월에 처음 제정된 「영화법」은 “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영화법」은 1970년대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는데, 1966년에는 법령 전문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6년의 「영화법」 개정은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영화법」의 개정으로 정부는 영화제작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국내영화의 수출과 외국영화의 수입, 그리고 영화의 제작과 상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중 외국인이 영화제작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제5조와 영화 내용에 대한 검열기준을 명시한 제13조, 그리고 외국영화의 수입 편수를 제한한 제19조가 주목된다. 이러한 조항들이 신설되면서 정부는 영화산업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정비되기 시작한 한국의 영화산업은 1960년대 들어 호황을 맞이하였다. 1960년대에는 영화 제작 편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연간 제작 편수가 231편에 달했다. 또한 질적으로도 발전을 이루어 다양한 장르 영화가 제작되었다. 외국 영화의 수입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외국 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외화관’이 있었을 만큼 외국 영화는 관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영화법」과 「공연법」의 제·개정을 통해 영화의 제작과 배급, 상영을 통제하고자 했다. 특히 1966년 「영화법」 개정에서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외국 영화의 수입 편수를 해당 년도 국산영화 상영 편수의 1/3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스크린쿼터제는 당국의 단속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1973년도 「영화법」 개정에서는 연간 상영일수의 2/3 이상을 초과해 외국 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후 영화관들은 스크린쿼터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산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은 여전히 외화 상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영화관에서는 과거 흥행한 외국 영화를 재개봉하거나 공연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산업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후 한국영화의 상업적 성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1980년대 중반 한·미 영화협상으로 한국의 영화시장은 대폭 개방되었으나, 스크린쿼터제만은 건재했다. 1990년대 이후 국산영화는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보호받으며 관객 점유율을 점차 높여갔다.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이는 한국 영화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국내 영화인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스크린쿼터제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 TV 시대의 도래

이 자료는 TV와 라디오의 대중적 보급으로 변화된 문화상을 정리한 신문의 사설이다.

해방 직후 10만여 대도 안 되던 라디오는 1965년에 125만 대로 늘어나 1960년대까지 대중문화를 선도했다. 1964년에 3만여 대에 불과하던 텔레비전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에는 180만 대, 1980년대에는 690만 대로 늘어났다. 물론 1번째 신문 사설의 내용처럼 초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확산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텔레비전 방송은 TV 수상기가 널리 보급되고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중문화 선도자로 등장하였다. 텔레비전이 ‘안방극장’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데는 드라마의 성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드라마 방영 시간이 되면 가사를 팽개칠 만큼 텔레비전은 여성의 일상을 바꾸는 위력을 발휘했다. 동시에 텔레비전 방송은 과도한 시청률 경쟁, 상업주의, 무분별한 외래문화 모방, 지나친 오락성 추구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주시경 차 총인 여성-주부와 어린이를 향해 텔레비전을 보면 바보가 된다고 경고했다. 2번째 신문 사설도 텔레비전 방송이 억지웃음을 강요하는 등 격조가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정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편성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총리와 의 대화’, ‘정부와의 대화’ 같은 정부 홍보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목적극’이라는 반공·경제성장 드라마를 제작하여 극화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반공의식이나 성장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반공반북 선전 내용을 담은 장편 연속극, 각종 실화나 비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예를 들어 KBS 라디오에서는 김삿갓이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의 실상을 비판한다는 가상 설정 프로그램 ‘김삿갓 북한 방랑기’를 매일 5분씩 내보냈다. 중앙정보부는 이 프로그램에 직접 자료를 공급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드라마나 영화 등의 미디어에서 실화 소재 이야기의 다수는 간첩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간첩 관련 드라마나 영화는 대개 실화이거나 실화처럼 보이도록 홍보되었다.

라디오는 텔레비전에 비해 편성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심야 라디오 방송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방송국에서는 리퀘스트 형식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리퀘스트는 청취자가 곡을 신청하면 방송국에서 해당 곡을 틀어주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라디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1978년 심야 방송에서 리퀘스트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AM 라디오에서는 팝송이 완전히 퇴출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인기를 누리던 음악과 코미디 등 대중문화 프로그램에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애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사료는 ‘난장이’ 가족의 삶을 통해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현실을 고발한 조세희(趙世熙) 연작소설의 일부이다. 1975년 발표된 「칼날」부터 1978년 발표된 「에필로그」까지 총 12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소설은 1978년 6월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2편의 연작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편소설로, 1979년 제1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소설은 연극으로 제작되어 1979년에 극단 세실이 처음 무대에 올랐고, 1981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소설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난쟁이인 아버지와 어머니. 큰아들 영수. 작은아들 영호. 딸 영희로 이루어진 가족은 인쇄소와 공장 등에서 낮은 보수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도시 빈민층이다. 어느 날 낙원구 행복동에 살고 있는 난쟁이 가족과 주민들은 통장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받는다. 동네를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 기존 주택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입주할 돈이 없는 행복동 주민들은 거간꾼들에게 입주권을 판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 값이 치솟자, 난쟁이 가족도 입주권을 영동(지금의 강남)의 부자 청년에게 판다. 영희는 입주권을 산 청년을 따라가 동거를 시작하고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을 꺼내어 집에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굴뚝에서 떨어져 죽었음을 알게 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도시 빈민층의 생계문제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도시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고용자로부터의 부당 행위 등에 시달렸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판자촌, 대규모 공장, 아파트 분양 현장 등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들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개발의 바람 속에서 나타났던 빈부의 명암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자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다. 이들이 주요 목적지는 서울이었다. 1960~1970년대에 서울의 인구는 급증했고, 그에 따라 주택난도 심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구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심 주변의 산동네에 판잣집을 짓고 거주했다. 판잣집의 수는 점점 늘어나 ‘판자촌’을 이루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판자촌을 도시문제를 만들어내는 ‘슬럼’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철거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판자촌 주민들을 도시 외곽의 ‘정착지’로 내보내는 ‘정착지 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현 성남시) 일대에 위성도시를 만들어 판자촌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광주대단지 사업’ 등을 벌였다. 그러나 판자촌에 살던 도시 빈민들은 대부분 서울 도심에서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시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었다. 1971년 8월에는 광주 대

단지에서 도시 빈민들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판자촌 정리를 위해 활용한 또 다른 정책은 재개발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판자촌을 철거한 자리에 저렴한 아파트를 세워 철거민들을 입주시킨다는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1970년 ‘와우시민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지면서 실패로 끝났다.

1970년대에는 주민들에 의한 자조(自助)적 재개발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철거 재개발 방식이 대세를 이루었다. 도시 빈민들은 자신이 살던 판잣집이 철거되는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자촌이 위치해 있던 도시 외곽 지역은 중·상류층을 위한 신혼 주거지로 변해갔고, 도시 빈민들은 점차 도시 바깥으로 밀려났다.

## 1970년대의 저항 문화

이 사료는 1970년 5월 발표한 김지하(金芝河, 1941~2022)의 시 「오적」과 김민기(金敏基, 1951~)가 작사 작곡한 곡 「아침이슬」의 가사이다.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군 장성, 장차관 등 당시 권력 상층부의 부정과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시다. 김지하는 「오적」을 발표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와 맞서 싸운 저항시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처음 『사상계』에 실린 「오적」은 민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다시 실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사상계』는 폐간되었고 『민주전선』은 압수되었으며, 김지하와 관련 인물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적」을 낭독한 국회의원도 투옥되었다.

「오적」이 발표된 1970년대는 도시 인구의 급격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대중문화가 발달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을 원했다. 특히 청바지와 통기타는 1970년대 청년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였다.

1960~70년대 외국의 청년문화는 베트남 참전 반대 투쟁, 인종차별 반대 투쟁, 여성 해방 운동,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저항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한국의 경우 ‘청년문화=저항문화’라는 등식이 확실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신문인 『대학신문』에서는 청년문화가 한낱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퇴폐 문화이며 ‘버터에 버무린 깍두기’와도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박정희(朴正熙, 1917~1979) 정부는 청년문화를 용납하지 않았고 획일화된 군사문화를 강요했다. 박정희는 1971년 1월 히피족의 TV 출연 금지를 지시하는가 하면 당시 유행하던 장발도 단속했다. 길거리에서 통기타를 압수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측정하기도 했다. 1



972년 봄 「아침이슬」이 실린 김민기(金敏基, 1951~)의 음반은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고, 1975년 말 「아침이슬」이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침이슬」은 이후 대학생과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애창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되었고, 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불려졌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와 학내 자치활동은 물론 그들의 일상까지 통제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억압은, 역설적으로 일정한 자유를 전제로 한 청년문화가 그 생산자나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정치적인 저항의 의미를 갖게 만들었다.

## 프로 야구의 개막

이 사료는 한국 프로야구의 창립계획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내용을 보면 당시 정부가 프로야구의 창립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부서에 경제적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지시했고, 구단에게도 프로야구가 성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12·12 쿠데타를 시작으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을 진압하고 설립한 제5공화국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화의 개방과 자율성을 과시했다. 3S 정책은 영상(Screen)·스포츠(Sports)·성문화(Sex)의 약칭으로 제5공화국의 상징적인 문화정책으로 꼽힌다. 제5공화국은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했다.

프로야구는 3S 정책 중 하나인 스포츠를 대표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1983년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출범했다. 1982년 3월 27일 동대문운동장에서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 경기가 열렸다. (全斗煥, 1931~2021)은 개막전에서 직접 시구했고,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야구를 황금 시간대에 중계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프로야구는 1980년대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일간지들도 많이 팔렸고 종합 일간지에서도 스포츠 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프로야구의 출범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먼저 주요 기업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맡도록 독려했는데 이 과정은 정경유착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 프로야구 출범 직후 삼성 라이온즈의 이건희(李健熙, 1942~2020)를 비롯한 구단주들은 서종철(徐鐘喆, 1924~2010) 초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정례 골프 회동을 가졌다. 다음으로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메달을 획득한 스포츠 선수가 병역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이외에 프로야구가 초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지역 연고제였다. 프로

야구가 출범하기 전에는 고교 야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였다. 고향과 모교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고교 야구 대회는 항상 붐볐는데, 프로야구는 바로 이 고교 야구의 인기를 고스란히 옮겨왔다. 고교 야구스타들이 다시 고향을 대표하는 프로 선수가 된 것이 지역감과 잘 맞아떨어졌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출범으로 한국에서도 프로스포츠 시대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프로농구도 출범하였다.

역설적으로 전두환 집권기에 가장 많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프로야구 구단은 호남을 연고로 한 해태 타이거즈였다. 광주 민주항쟁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차별받던 호남 사람들에게 해태와 프로야구의 의미는 각별했다. 야구장은 언론에서 금지된 ‘김대중(金大中, 1924~2009)’이라는 이름을 연호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었는지 2000년 전까지 광주에서는 5월 18일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 신군부가 한국야구위원회에 5월 18일은 광주 홈경기를 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영상, 스포츠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영상 부문에 있어서는 케이블TV의 개국, 대자본의 투입, 직배급 체제 도입,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관 같은 영화 산업의 재편 등으로 IMF의 여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단위 영화로 천 만 관객을 유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스포츠 역시 농구, 배구 등의 프로화가 이루어짐 함께 연고지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프로야구는 출범 초기 144만 명이던 누적 관중 수가 2017년 840만 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은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 남극의 세종 과학 기지 건설

이 사료는 1988년 2월 17일 한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준공 현판식을 다룬 과학기술부 공식 문서와 언론의 취재 기사이다. 남극은 1819년 영국의 선원들이 처음 발견하고 1911년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젠(Roald Engelbregt Gravning Amundsen)이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이래, 1957~58년 국제지구물리관측년도(IGY)를 통해 처음 체계적인 연구·관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59년 12월 1일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남극조약을 체결하고, 1961년 6월 23일 정식 발효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극의 환경보호 및 평화적 이용, 비핵지역으로의 설정 등이다. 이 조약은 냉전 이후 최초로 체결된 군비 규제 협정이었다.

대한민국은 1978년 수산청의 지원으로 남극해에서 처음으로 크릴새우 시험 조업을 하고, 1985년 2월 한국남극관측 탐험대가 현재 기지가 위치한 킹조지(King George) 섬을 처음 조사했다. 이 섬은 남극 서남부지역의 남극반도 앞바다에 위치한 남셰틀랜드(South Shetland) 군도에 있다. 대한민국은 1986년 11월 28일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

으며, 1987년 초부터 외무부와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남극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87년 4~5월 이 지역을 답사한 조사단은 기지의 최종건설 후보지로 킹조지섬 바튼(Barton) 반도의 북서 해안을 선정했다.

1987년 12월 15일 174명의 건설단이 현장에 도착해 기지를 착공하였고, 1988년 2월 17일 기지의 준공이 완료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18번째로 설치된 남극 과학기지였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이 기지에 축하전화를 전했고, 박금식 과학기술부장관의 치사가 현장에서 낭독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1989년 남극조약 이사국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를 획득했고, 1990년 개최된 제21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또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이전에 과학기술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해양연구소 산하 극지연구실(현 극지연구소(KOPRI))이 1987년 3월 설치되었다. 이곳에서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포함한 극지방 기지의 연구와 상주 업무를 담당했다.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이어 2002년 4월 28일에는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 섬에 북극다산과학기지가 설치되었다. 2009년 11월에는 극지방 결빙해역의 연구 및 기지보급을 위한 쇄빙연구선 ‘아라온’이 한국 최초로 건조·진수되었고, 2014년 2월 12일 남극 대륙 동남부에 위치한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Terra Nova) 만 연안에 한국의 두번째 남극 과학기지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 건설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이곳에서는 해양생태계, 지질·지구물리학, 기후 변화를 비롯한 대기과학, 우주과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과, 광물자원 및 수산자원 등의 탐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건설은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력의 신장,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다.

## 서울 올림픽 개최

이 사료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태우(盧泰愚, 1932~2021)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이다. 이 담화에서 노태우가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국의 ‘발전’이다. 그는 한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가장 성대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며, “경제의 기적”과 “민주정치 기적”에 이어 “선진국이 치른 어떤 올림픽보다 훌륭한 올림픽을 치르는 ‘교화국민의 기적’”을 이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둘째는 서울올림픽의 ‘평화’적 의미이다. 노태우는 서울올림픽이 “12년만에 동서세계가 다함께 참가”하는 “세계평화의 제전”임을 강조하고, 올림픽이 “분쟁의 땅”인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는 서울올림픽이 “선진국으로 들어

가는 관문”이자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문을 여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국민들의 단합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1978년 아시아 최초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다. 박종규(朴鍾圭, 1930~1985) 대한체육회장과 정상천(鄭相千, 1931~2015) 서울시장에 의해 올림픽 유치가 공론화되었으며, 1979년 7월에는 문교부가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정부 수준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1979년 9월 서울시는 1988년 제24회 올림픽경기를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1979년 10월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통령 시해,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내 정치의 격변으로 인해 서울은 1980년 하반기까지 올림픽 신청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 제출하지 못했다. 새롭게 집권한 전두환(全斗煥, 1931~2021) 정부는 스포츠와 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 바깥으로 돌리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설정하고, 1981년 2월에 공식 신청서를 IOC에 제출했다.

서울은 1988년 올림픽 개최를 두고 일본 나고야와 경쟁했다. 서울은 올림픽 개최 의지·시설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공산진영 국가들의 반대 가능성 때문에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고, 결국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 바덴(Baden-Baden)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나고야를 52대 27로 누르고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2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AGF, Asian Games Federation) 집행위원회에서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권도 확보하였다.

한국 정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범위한 사업을 벌였다. 먼저 1981년 내무부는 ‘올림픽새마을 7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올림픽새마을 사업은 “친절·근검·정직의 예의민족, 청결·질서·품위의 선진사회, 전통·미풍양속의 문화국민”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85년에는 ‘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가 발족하여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도심지의 재개발을 실시하는 한편, 올림픽공원과 올림픽선수촌 등 경기 관람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1988년 9월 17일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최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이 냉전 상황에서 ‘반쪽 올림픽’이 되었던 것에 반해, 서울올림픽에는 새롭게 조성된 ‘탈냉전’ 분위기로 인해 공산진영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16일간 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등 33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4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 개최의 이면에는 도시빈민을 비롯한 사회 기층구성원의 배제가 존재했다.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무허가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도시 빈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었다. 또한 도시노점상을 철거하고 불량자와 장애인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로 인한 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 일본의 대중 문화 개방

이 사료는 일본 도쿄에 있는 테이코쿠호텔에서 1998년 10월 10일에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문화계 인사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어를 사용해 인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번역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업무참고자료로 작성하였다.

우선 이 사료를 통해 일본의 대중 문화 개방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문화교류협의회를 창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다. 또 단순히 정신적 풍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발달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담회 자료에는 일본 문화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도 함께 실려 있기에, 그들의 입장과 의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규정하자면 일본에서 제작된 혹은 일본어/일본인이 나오는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만화, 방송프로그램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본 대중문화는 오랫동안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유통될 수 없었다. 해방 직후에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흔적을 지우고 문화적 독립을 이루는 것을 민족적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는 지속되었다. 조금이라도 일본과 관계가 되었거나, 일본풍이라고 여겨질 작은 구실이 있다면 왜색(倭色)이라며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금지되었다.

그렇다고 일본 대중문화 매체를 수입하고 유통하면 안 된다는 법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연법」, 「방송법」, 「영화법」 등 일반 대중문화 관련 법 조항 가운데서 수입 금지 근거 조항들을 적용하여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막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입과 유통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일찍부터 밀수 등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 부산에서는 일본의 TV나 라디오 방송 전파가

잡혔고, 1980년대 후반에는 위성방송, 잡지 등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가 소개되었다. ‘해적판’이라고 불렸던 무단 복제 만화와 영화, 비디오도 활발히 유통되었다. 이미 현실과 일상 차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구체화 되었다. 1994년 7월 문화체육부가 발한 보고서에는 1995년부터 단계적 개방을 실시하고, 1998년에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정책을 추진한 1994년에는 개방 찬성 여론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방이 추진되지는 못한 채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개인으로서도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배경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정책을 이끌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부문의 대대적인 개방은 일본 대중문화 산업에도 개방의 문을 열게 하였고, 한국 문화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필요했다. 또한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교류의 확대는 피할 수 없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교류와 반목을 거듭해왔던 한일 관계는 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당시 일본 총리인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와 회담한 후 10월 8일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을 통해 문화교류의 확대를 약속했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허용할 것이 표명되었다.

일본 대중문화는 전면개방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방되었다. 1998년 10월 20일 제1차 개방 때는 영화 및 비디오, 출판 산업 분야에서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1999년 9월 10일 제2차 개방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영화 및 비디오 부문의 개방을 확대하고, 새롭게 일본 대중가요의 공연을 제한적이거나 허용하였다. 2000년 6월 27일 제3차 개방을 통해서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화의 상영과 비디오 출시가 허용되었으며, 대중가요 공연도 제한 없이 전면개방 되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부문의 개방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2년 즈음 완전 개방이 가능하리라 예상되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우익 교과서의 역사왜곡 등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가 개방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월 1일 제4차 개방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 개방이 가능해졌다.

개방을 통해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를 폭넓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일어났고,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미국 TV 드라마의 확산과 영향

이 사료는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에 실린 기획기사이다. 2007년 8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문화콘텐츠포럼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 한국에서 크게 불었던 미국 드라마(미드) 열풍에 대해 전달한다. 포럼 제목 〈미드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1998년에 개봉하여 크게 흥행했던 영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를 패러디함으로써 한국의 미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드’는 한국 일부 시청자 층에서 인기를 누리는 미국 드라마의 줄임말이다. 미국 드라마는 미국 자본으로 제작되고, 연출부와 출연진이 미국 혹은 그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제작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유행을 바탕으로 널리 쓰이게 된 용어인 만큼 엄밀하게 개념이 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드 열풍은 2000년대 중반에 생겨났지만, 한국에서의 미국 드라마 시청은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한국에 방영된 〈맥가이버〉와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미드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TV를 통해 방영되었는데, 해외에서 이미 인정받은 드라마들을 수입하여 지상파 TV 채널에서 방송하는 형태였다. 1990년 이후 국내 방송사 드라마의 양이 늘어나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드라마 유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황금시간대가 아닌 심야시간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에 해외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당시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엑스 파일(X-file)〉을 꼽을 수 있다.

1995년 케이블TV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해외 드라마 수입은 다시 활성화되었고, 〈프렌즈(Friends)〉 같은 미국 시트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가 흥행하면서 패션을 비롯한 생활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이 주요한 정보 교류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미드의 소비는 더욱 활발해졌다. 단순히 혼자서 드라마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를 만들어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실시간으로 해외 웹사이트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오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미드족’ 혹은 ‘미드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CSI〉, 〈로스트(LOST)〉,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 등, 앞선 사료에서 언급한 다양한 미드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드 열풍이 2000년대 중반에 불게 된 배경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드의 높은 완성도와 다양한 소재는 미드 열풍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다. 한국 드라마가 불륜, 재벌, 질병, 출생의 비밀과 같이 식상하고 진부한 소재를 다루는 데 반해 미국 드라마는 SF, 의학, 법학, 범죄 등 풍부하고 신선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거대 자본이 투입된 만큼 촬영과 편집에 있어 국내 드라마와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과거의 지상파 TV 중심에서 케이블 TV로 시청자층이 이동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케이블

TV 채널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를 묶어둘 콘텐츠가 필요했는데, 그 필요성을 채워준 것이 다양한 미드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은 미드 열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온라인으로 미드를 쉽게 구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등장하였다. 열성적인 미드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이것이 다시 케이블 TV로, 지상파 TV로 대중적인 확산을 하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미드 열풍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미드 속 주인공들이 입은 옷, 먹는 음식, 그들의 생각과 태도는 한국인들의 삶에 크든 작든 변화를 가져왔다. 브런치(brunch)가 유행하게 된 것도 미드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지만, 영어 습득에 대한 욕망도 미드 열풍과 관계가 깊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이 사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식 보고서에 실린 글로, 2002년 개최된 ‘한·일 월드컵’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Korea-Japan World Cup)은 한국과 일본이 2002년에 공동 개최한 월드컵 축구대회를 가리킨다. 이 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강호들을 꺾고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일 월드컵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는 한·일 월드컵이 한국사회의 ‘화해와 질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붉은 악마’라고 불린 응원단을 이끈 ‘월드컵 세대’의 탄생이다.

이 사료에서 한·일 월드컵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회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함께 응원구호를 외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월드컵은 한국인들이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 아래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열띤 응원은 ‘질서’와 ‘청결’이라는 기준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일 월드컵 기간 중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이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오를 만한 수준에 놓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 사료에서는 ‘월드컵 세대’라 불리는 신세대의 탄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스스로를 ‘붉은악마’로 자처한 응원단은 태극기가 그려진 응원 티셔츠·머플러 등을 입고 거리에 나와 ‘대~한민국’과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다. 이러한 ‘붉은악마’ 현상을 이끈 주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의 젊은 세대였다. 이 사료는 이들을 ‘월드컵 세대’로 호명하며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되는 이들만의 특징을 정리한다. 첫째는 이념보다 ‘취향과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배타성이 제거된 애국심을 보여주었으며, 셋째는 수직적 공동체주의를 벗어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수평적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세대의 등장”이라는 평가는 월드컵 세대의 등장에 대한 당시 기성세대의 흥분을 보여준다.

한편 한·일 월드컵은 ‘광장’이라는 공간을 한국 사회에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다. 월드컵 이후 광장과 같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 광화문광장 조성은 그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이후 광장은 시위와 집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중국의 ‘동북공정’

첫 번째 사료는 2002년 7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개최된 ‘제2차 동북변강역사와 현재 상황 및 고구려 학술연구토론회’라는 회의에서 발표된 글이다. 필자인 취앤쩌주(全哲洙)는 당시 지린성 부성장이자 이하에 설명할 ‘동북공정’을 지도하는 ‘동북공정영도협조기구’의 ‘영도소조’에서 부조장을 맡은 인물이었다. 행정 책임자가 직접 기고한 글이자, 전체 글 중에서 ‘서론’에 배치되어 있는 이 글은 ‘동북공정’에 대하여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사료는 2004년 8월 7일 『한겨레』에 실린 ‘동북공정’ 관련 기사이다. 단순한 학술연구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북공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강행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는 2002년 2월 28일부터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5년 계획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중국 동북쪽의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줄여서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고 부른다. 동북공정 대상에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에서 중요 의제로 등장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동북공정이 추진한 역사 왜곡은 과거 문제뿐 아니라 현재 국경 및 영토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국가 전략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소수민족 정책이 중요하게 등장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국경 지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공산권의 해체,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등을 거치며 더욱 강화된다. 동북공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동북3성(지린성 吉林省, 랴오닝성 辽宁省, 헤이룽장성 黑龙江省)은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고, 현재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북한과는 국경을 맞댄 곳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추진 배경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3개국의 관계 변화와 변경지역의 상황 변화라는 외교적·정치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한 학술적 목적에 의한 프로젝트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책임자는 과거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속에서 고대 동북지역의 역사 연구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고대 동북지역의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한 이후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만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중국에 전해졌고,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깨닫게 된 점도 동북공정이 추진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하자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정하고 재빠른 대처를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역사적 명분을 만들고, 조선족을 대상으로 중국 국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동요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할 이념이 필요했다.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4년 8월 한중 구두양해사항 합의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7년 2월, 5년 계획으로 추진된 동북공정은 겉으로 보기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추진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공정은 단순히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 같은 학술문제 차원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사업의 종료가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않았다. 동북공정의 연구성과들은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의 표지판이나 박물관 안내문, 대학 교재 등에 수록되어 일반 중국인들의 상식을 바꾸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와 정책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남북이 공동으로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도 진행하였다. 여러 민간단체들도 이와 같은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남북 역사학자 공동 성명

이 사료는 남북 역사학자들이 2001년 3월 2일 평양에서 발표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다. 3·1절 82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일제의 조선 강점 비법성에

대한 남북 공동자료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3월 1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는 서지학자인 이종학(李鍾學) 사운연구소 소장이 수집한 일본 강제 병합과 관련된 자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가져간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등 1,0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시회에 참가한 남측의 역사학자와 북측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남북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남측에서는 강만길(姜萬吉) 고려대 명예교수, 안병욱(安秉旭) 가톨릭대 교수, 이종학 사운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원종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정남용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이른바 '적법성'과 '유효성'을 운운하며 조선 침략과 강점을 정당화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역사 위조행위이며 새로운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학술토론회 이튿날인 3월 2일, 토론회에 참가한 남북 역사학자들 일동의 명의로 2001년 당시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은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남과 북의 한민족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끝을 맺는다.

일본 우익이 주축이 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제는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논쟁 등 일본 국내문제였는데, 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시작으로 한·중·일이 포함된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부상하였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일본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16종 중에서 24개 항목, 167군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본 정부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에 굴복하여 1983년에 재검정을 하기로 함으로써 교과서 왜곡 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2001년 4월 3일, 2002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사용될 8권의 책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였다. 여기에는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 외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들고 후쇼사(扶桑社)에서 출판한 교과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예전의 교과서에 비해 과거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가해 사실을 미화 왜곡하고 축소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많았다. 2001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2000년 여름부터 우려할 만한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본격화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우려의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하였다. 사료를 통해 본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성명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맞선 남과 북의 공동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의 대응도 활발해졌다. 2002년 3월부터 한·중·일 3국의 연구자와 교사, 시민들이 모여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개최했고, 3국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동교재를 만들자는 제안이 동의를 얻어 공동작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4년 동안의 모임과 회의를 거쳐 『미래를 여는 역사』를 한·중·일 3국에서 동시 출간하기도 하였다.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커진 교과서 왜곡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민관 합동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 11명씩 총 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역사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현실적인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2011년 3월을 끝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에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모든 지리, 공민, 역사교과서에 확산 기술됨으로써 교과서 문제의 초점이 ‘역사왜곡’에서 ‘독도 영유권 기술’로 옮겨가게 되었다. 2020년의 교과서 검정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

#### 일본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의 성명서

이 사료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 한국 정부에 보낸 요청서이다. 2009년 12월에 발표된 요청서는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01년에 촉발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하였다. 2001년 4월 국내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기 위해 86개의 시민사회단체, 학자, 교사 등이 모여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2003년에 단체 명칭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로 변경하고, 한·중·일 역사인식과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중활동과 연구, 출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은 그 뿌리가 깊다. 역사교과서 검정에 관한 일본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2001년이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것이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영토문제로까지 커졌다. 한국과 문제를 일으켰던 곳은 독도였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가운데 우익 교과서는 2003년부터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였다. 2006년부터 새로 사용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교과서 45종 가운데 30종의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다. 2008년에는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이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각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이다. 2008년 3월 독도 교육이 포함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었고, 2009년 3월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었다. 그리고 각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해설이 2008년 7월과 2009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중학교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간에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북방영토(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지역)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었다. 고등학교 해설서에는 독도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중학교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요청서는 이와 같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 강화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었던 독도 교육 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내용 체계의 구성이 요구되었다. 2011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역사와 지리 관련 과목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의 명시를 일본이 시작했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발간된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은 2012년 3월 통과되었다. 여기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2017년 중학교 해설서 및 2018년 고등학교 해설서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계속 항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강화해 나갔다. 2008년과 2009년의 해설서에서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2014년 이후의 해설서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을 띤 적극적 자세로 변모했음이 눈에 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결국 현재의 영토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재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위해 역사적 사건을 끌어오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하는 역사왜곡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19세기~20세기에 걸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한·일 병합 조약 무효 선언·‘한국 병합’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

이 사료는 2010년 5월 10일에 발표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이다. 한국 지식인 109명, 일본 지식인 105명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에 발효된 한국병합조약이 불의·부정·부당(不義·不正·不當)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본에서는 도쿄 일본교육문화회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과거사 문제는 다양하다. 식민지 책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 문화제 반환 문제 등 광범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한국병합조약이 핵심이 된다. 한국병합조약과 그것에 연계되는 일련의 조약이 불법·무효라고 인정된다면 식민통치와 전쟁범죄에 대한 공동인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에 두 나라 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1995년 이후의 연구 환경 변화에 기본적으로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사료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 성과에 공동 논의가 증가했다. 특히 2009년에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무효·불법성’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로 인하여 성명서의 문안에 한국병합의 불법성을 직접 언급하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

2009년 2월과 7월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항소심에서 한국 고등법원이 일본 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승인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식민지배 합법론과 한일협정 완결론을 전제로 진행되었기에 한국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으로 승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청산되었거나 법적인 시효가 소멸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는데, 한국 고등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법적인 싸움에서도 조약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다.

2009년 가을에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민주당 내각이 탄생한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0년 일본 정부에게 수상 담화를 발표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겨났다. 한국병합조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성명 발표를 논의했던 일본 역사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활동의 구상이 싹트고 있었다. 마침 이때 한국의 지식인 그룹이 일본 측에 양국 지식인의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2009년 11월에 김영호(金泳鎬) 유한대 총장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연락을 취한 후,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성명의 초안을 일본 측에서 준비하고, 그 뒤 한국 측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차츰 통합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성명이 정리되었다. 약 5개월 동안 다섯 차례 절충을 거친 후에 합의안이 나왔다. 기존의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병합조약은 부당한 체결이지만 국제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만큼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유효부당론’을 갖고 있었다. 이 공동성명은 논쟁을 통해 조약이 처음부터 불법·무효라는 한국 측의 주장을 일본 측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공동성명 발표 이후 서명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2010년 7월 28일에는 한국 측 587명, 일본 측 524명이 참여하여 재차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성명이 발표된 상황에서 2010년 8월 10일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 ‘한일병합 100년 수상 담화’를 결정하여 발표했다. 지식인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총리의 담화가 나온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한일 관계에서 양국 정부는 여전히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북한과 일본 사이의 역사 청산, 국교정상화 문제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정

이 사료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이하 “고노 담화”)의 전문이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학순(金學順, 1924~1997)의 실명 증언은 한국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학순 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김학순의 증언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1946~) 등 관련 역사학자들이 군의 위안소 운영의 관여를 입증하는 공문서를 공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피해 당사자, 시민운동, 국제여론의 고조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의 공개로 일본 정부는 이전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자료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배경으로 1992년 1월과 7월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1939~2016)가 2회에 걸쳐서 ‘가토 담화’를 발표하게 되었다. 1992년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바 있고, 1992년 7월 6일에는 위안소의 설치, 운영, 감독에 정부 관여를 인정하였다. 가토 담화 이후 일본 정부는 관련 정부부처에 관련 공문서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가토 담화의 약 1년 후인 1993년 8월 4일에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1937~) 관방장관이 조사 결과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고노 담화’이다.

고노 담화의 주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군 관여 사실의 인정이다. 고노 담화에서 군의 관여 사실은 몇 가지로 제기된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다는 점,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

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담화 내용에서 인용되고 있다.

둘째, 일본군‘위안부’에 관련된 강제성의 인정이다. 고노 담화에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모집의 방법에 관해서“감언이나 강압적인 방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 밝히고 있다. 또한 위안소 자체의 상황을 “강요당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비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견해를 통해 고노 담화는 당사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셋째, 진실규명과 역사교육의 의사 표명이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의 본문에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고노 담화의 배경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피해 당사자, 시민운동, 국제여론의 고조가 있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군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모집과 이송에 강제성, 위안소의 가혹한 상황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진실규명, 역사연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고노 담화의 영향으로 1995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1997년부터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사실이 기재되기 시작했다.

고노 담화의 가장 큰 의의는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에 의거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한 공식 견해라는 점이다. 고노 담화를 기반으로 하여 1995년 무라야마 도미미치(村山富市, 1924~) 총리가 담화를 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발족되기도 하였다. 고노 담화 당시부터 일본 내 보수파 및 국회의원들은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2022) 총리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기본 방침은 고노 담화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많은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고노 담화’는 모집에 관해 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구(舊) 일본군이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조직적 책임의 주체가 아닌 ‘관여’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 자체의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진상규명, 법적 배상에 대해서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역사연구, 교육을 통하여 이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새기겠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노 담화 이후 공개된 자료 및 연구성과를 반영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기술은 1990년대 후반에 오히려 후퇴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이 사료는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Deshamanya Radhika Coomaraswamy, 1953~)가 제출한 「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파견조사 보고서」(이하 “쿠와라스와미 보고서”)의 발췌문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은 폭넓은 국제협력을 이끌며 전개되었다.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의 활동가 및 연구자들은 일본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였다. 1990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가 발족한 후에는 아시아 피해국의 연대운동을 전개하며 아시아연대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피해자 및 지원단체는 일본 정부에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했다.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및 소수민 차별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다(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이고,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한다).

1992년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소위원회는 1993년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전쟁 중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범주에 넣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린다 차베스(Linda Chavez, 1947~)를 ‘전쟁 중의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996년 제1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린다차베스의 보고서는 조직적 강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 국가 및 개인의 책임, 사법기관 제재, 배상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런 흐름으로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1998년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Gay MacDougal, 1947~)이 전쟁 중 성노예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지원단체의 노력으로 2000년부터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라는 이름으로 상정하도록 결의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은 2008년 인권소위원회가 인권자문위원회로 개편되기 전까지 매년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논의되었다. 1994년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신설되었다. 여기에 스리랑카 출신 변호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임명되었다. 지원단체는 쿠마라스와미에게 여성폭력 문제의 하나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사를 요청하였다. 쿠마라스와미는 1995년 7월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한 등의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항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정의, 2. 역사적 배경, 3.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법 및 활동, 4. 증언,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입장, 6. 대한민국의 입장, 7. 일본 정부의 입장, 8. 도의적 책임, 9 권고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사료는 이 중 1. 정의 및 10. 권고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은 총 두 가지다. 첫째,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쿠마라스와미는 ‘위안부’라는 용어가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했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일본군 성노예제로 널리 확산되었다.

둘째, 일본 정부에 권고하는 9가지의 항목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권고는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하는 권고, 국제적 차원에서 NGO, 남북한 및 유엔에 하는 권고로 나눌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 제기한 권고가 (a)~(f)이다. 쿠마라스와미는 일본 정부에게 (1) 일본군 위안부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 것, (2)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할 것, (3)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공개를 보장할 것, (4) 피해자 개개인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5)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할 것, (6) 가능한 한 범법자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적 차원의 권고는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권고로 첫째, NGO가 유엔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과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 둘째, 한국 및 북한 정부가 일본의 책임 및 배상 등 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의할 것을 고려할 것, 셋째,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고령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감안하여 빠르게 행동할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홍보하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채택을 저지하려 했다. 일본의 정치적 압력과 국제연대를 내세운 지원단체의 지지 사이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유의(take note)하다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국제연맹에서 최초로 제시한 일본군‘위안부’관련 보고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군‘위안부’를 전시 성노예로 명명하였다는 점이다. 쿠마라스와미는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쿠마라스와미는 1996년의 보고서 이후에도 1998년에 추가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

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adhika Coomaraswamy)」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戰時) 여성폭력 문제로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르완다 등 내전 및 소수민족 간 갈등으로 발생한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에서 20년 이상 논의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성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엔의 공식 문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범죄성,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도 다루어지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2007년 미 하원 결의안으로 이어졌다.

####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

이 사료는 2007년 7월 30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이다.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국의 피해자와 및 지원단체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려 노력했다. 이를 반영하여 유엔에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내 인권위원회(UNCHR), 인권소위원회(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6년에 채택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Deshamanya Radhika Coomaraswamy, 1953~)의 이름을 따서 부름], 1998년 맥두걸 보고서[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MacDougal, 1947~)의 이름] 등 보고서 제출이 이어졌고,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이 개최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결의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재미동포 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피해자를 초청하여 증언집회 등을 개최했다. 이에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잇따라 재미동포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관심과 지원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97년부터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출되기 시

작한다. 1997년 일리노이주의 다니엘 윌리엄 리핀스키(Daniel W. Lipinski) 의원은 모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126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2000년에 들어서이다. 일리노이주의 레인 에반스(Lane A. Evans) 의원이 다른 30명의 의원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357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에반스 의원은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관련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에반스 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H. Smith)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759결의안’이 미 하원 국제외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로비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미의회 의원들이 노력은 10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것이 2007년 제기된 ‘121결의안’이다. 2007년 1월 131일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크 혼다(Mike Honda) 의원의 주도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환경소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2007년 2월 15일에는 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피해자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김군자(金君子, 1926~2017), 이용수(李容洙, 1928~)가, 네덜란드에서는 얀 러프 오헤른(Jan Ruff O’Herne, 1923~2019)이 피해를 증언했다. 이 결의안은 2007년 6월 26일 미 하원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었고, 2007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본문에 제시된 121결의안은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이다.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사 매춘’으로 정의하였으며 20세기 인신매매 역사 중 가장 대규모 사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켰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121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9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에 서명하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아시아여성기금의 평가이다. 121결의안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아시아여성기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다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이다. 121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 총리의 공식담화 및 일본 국내의 일본군·위안부·부정의 목소리에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을 다시 권고하고 있다.

121결의안은 1990년대부터 등장한 결의안 내용을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라는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인정, 교육의 요구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후 조정 과정에서 초기 결의안들에서 보이는 ‘배상 요구’가 삭제되었고, 일본의 아시아 평화기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인정’으로 표현되었다. 일본 정부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지적 역시 삭제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법 준수와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미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채택되는 데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인 단체들이 전개한 국제 연대활동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여기에는 미주 한인들의 힘이 컸다. 이미 1990년대부터 워싱턴 등지에서는 일본군‘위안부’관련 지원단체가 만들어져 미주 강연, 심포지엄, 국회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크 혼다 의원에 의해 121결의안이 제안된 이후에는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 약 14개 지역에서 시민운동 조직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재미 한인교포를 중심으로 아시아, 남미계 및 유럽계 미국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여기에 지역 운동이 협력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전국 연대회의를 만들어 서명운동, 신문광고, 미 국회의원 의원 설득 등을 진행하며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결의안 채택은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는 시초가 되었다. 2007년에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유럽(EU)의회에서, 2008년에는 대만과 필리핀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일본 지방의회에서도 2008년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의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간사이 지역 (16개 지방의회), 오키나와 (5개 지방의회), 간토 지역(10개 지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의견서가 채택되기에 이른다.

한편 한국 국회는 2008년 10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도 이어졌다.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국내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